

45

청년들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지자체 주요시책을 중심으로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ddackue@makehope.org

No.45
2019.09.26.

희망이슈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시민에게 공유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
희망이슈

모든 시민이 연구자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정부나 기업의 출연금 없이
설립된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시민의 아이디어 제안과 후원, 활동 참여로
열린 연구와 실천을 지향하는
싱크앤두탱크 Think & Do Tank 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원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하는
강연과 워크숍을 열며, 1인 연구자와
사회혁신가를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요약 청년들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997년 IMF 이후 청년 문제가 본격 대두된 이래 정부의 청년 정책은 일자리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취·창업 중심에서 복지, 교육, 인구 등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했지만 청년들을 둘러싼 전반적인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고, 관련 정책의 재검토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

청년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들이 정책의 '수립-실행-평가'에 이르는 3단계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당사자인 청년과 이를 함께 추진하는 행정 사이에 원활한 소통·거버넌스 체계가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주요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고 행정, 의회, 청년 당사자 등이 참여

하는 심의·의결기구(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부서 역할 강화', '심의·의결기구 운영 내실화'가 기본 선결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행정의 논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청년 정책 거버넌스 조직 가운데 먼저 '행정 전담부서'는 현재 정책총괄 기능을 하기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력 및 보유했던 등이 약하다. 이에 시장 직속 조직으로 편재해 청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경기 시흥시 사례는 시사점을 준다. 부서 규모의 경우, 타지역 민간기구보다 많고 주요정책 역시 정책 거버넌스 역량 강화에 맞춰져 있다. 이와 함께 타 부서와의 협력도 원활하게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정책 심의·의결 기구(청년정책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사례로 꼽힌다. 무엇보다 전체 위원 중 청년 비율이 42%를 차지하며, 청년들이 참여하는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되, 분과별 최소 2~3회의 별도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전북 완주군은 청년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 조직인 청년정책네트워크단을 활용해 다양한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청년정책네트워크단 분과 모임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청년들이 예산 및 집행 과정을 고민하도록 한 '청년참여예산제', 군 내 각종 위원회에 청년 비율을 높이도록 한 '청년할당제' 등 각종 사업참여 기회를 만들었다.

본 희망이슈는 청년 정책 소통·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관점을 다뤘다. 결국 광역·기초 지자체가 제도개선 권한과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가진 만큼, 청년 정책 활성화의 열쇠는 행정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활한 거버넌스는 일자리 주거 부채 등 분야별 청년 정책을 당사자 주도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거버넌스 기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과연 당사자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은 이번 이슈의 한계이자 후속 연구를 통해 다뤄야 할 지점이다.

키워드

청년, 당사자, 거버넌스, 소통,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한국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본격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IMF 때로 평가된다. 청년실업률 증가와 맞물려 주거난, 부채 증가 등이 연쇄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당시 정부는 청년 문제를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경제난'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취·창업 지원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들어선 정부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며 일자리 정책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해외 취업, 공공기관 인턴 등 주요정책이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보다 단순 취업자 수 증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청년실업률¹ 역시 떨어지지 않자 관련 정책의 재검토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김종진 2019).

문제 제기의 핵심은 소위 전문가와 정부 관료 중심으로 내놓는 기존 정책이 정작 당사자들의 광범위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청년들은 단순히 경제적 이슈 외에도 여성·장애인 차별, 인권, 미세먼지 문제

1.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8%이다.
2019.07.

청년 정책도 해를 거듭하며
복지, 교육, 인구 등으로
범위를 확장했지만 청년들을
둘러싼 전반적인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다.

까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주제에 포함시켰다. 청년 문제가 청년들이 처한 위기에 관한 문제를 넘어 그들이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주제를 포괄하는 말로 전환된 것이다. 물론 청년 정책도 해를 거듭하며 복지, 교육, 인구 등으로 범위를 확장했지만 청년들을 둘러싼 전반적인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다(김선기 2017).

청년 정책의 효용성을 높일 방안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청년들이 정책의 '수립-실행-평가'에 이르는 3단계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에는 관련 연구자나 활동가들 사이에 이견이 크지 않다.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분야별 의미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이를 최종 정책화 또는 제도화 단계에 이르게 하려면 행정과 청년 간 소통·거버넌스 체계가 흔들림 없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요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고 행정, 의회, 청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논의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의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표적으로, 이런 기구들이 단순히 설치를 넘어 정당성을 이어가려면 운영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당사자인 청년들이 자신들에게 정책 참여기회가 주어졌을 때 행정의 논의 파트너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서복경 2017).

따라서 본 희망이슈에서는 더 나은 청년 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소통 및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전담부서 역할 강화', '심의·의결기구 운영 내실화', '청년들의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주요 지자체 실행 사례를 통해 뒷받침하고자 한다.

II.

청년 정책 거버넌스 조직

광역 및 지방 자치단체의 청년 정책 거버넌스 조직은 대표적으로 행정 내 전담부서와 정책 심의·의결 기구(‘청년정책위원회’), 당사자 참여기구(‘청년정책네트워크’ 또는 ‘청년정책협의체’)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정책 심의·의결기구와 당사자 참여기구는 지자체의 청년 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청년기본조례’에 설립근거와 역할이 명시돼 있다. 청년 정책 소통·거버넌스 조직으로서 세 기구가 현재 지자체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1. 행정 내 전담부서

지자체에 설치된 청년 정책 전담부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혁신’, ‘자치’ 등 여러 부서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부서를 배치한 경우다. 자치단체장 직속 형태가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현재 시장 직속 기구인 ‘청년청’ 아래 총 7개의 청년정책팀을 운영 중이다. 2018년까지 역시 시장 직속 부서인 혁신기획관(실) 아래 청년정책담당관이 담당하다, 올해 3월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출범과 함께 청년청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청년청은 당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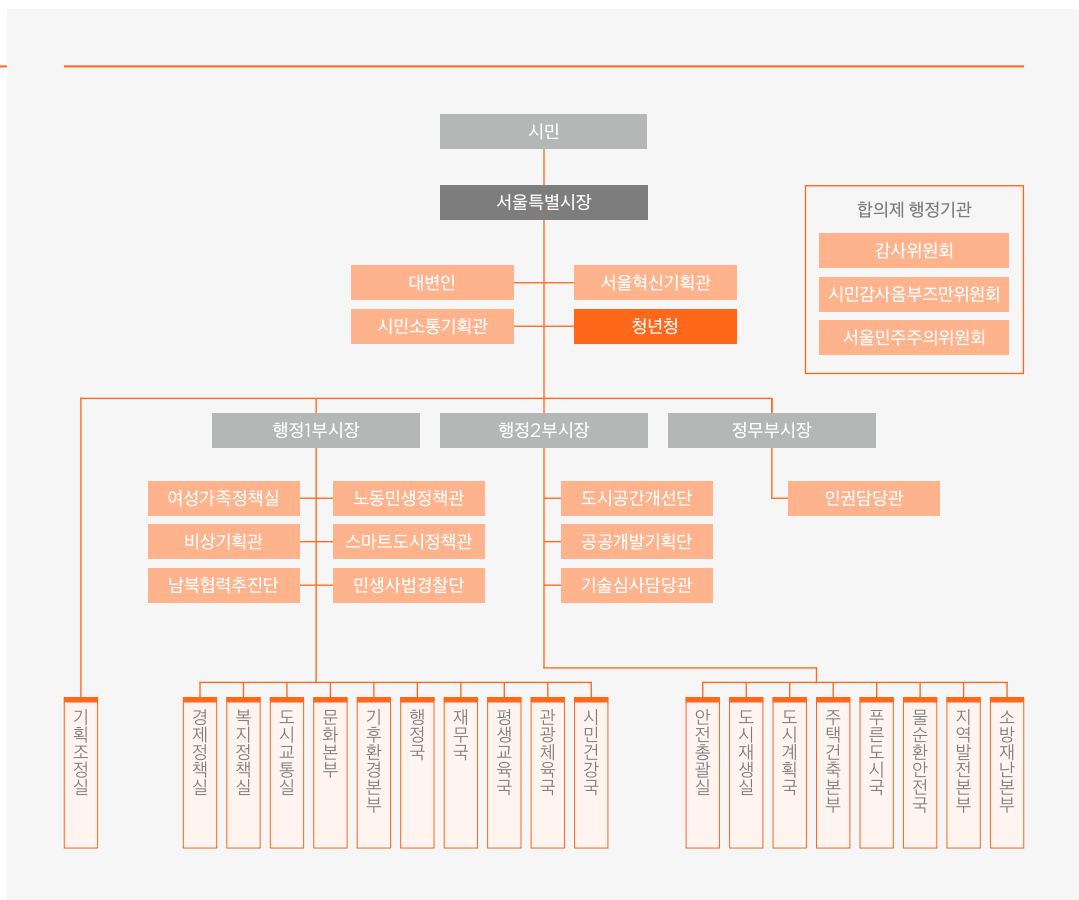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조직도

참여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함께 청년자치정부를 이루는 핵심 기구로서 청년 이슈를 넘어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광주 사례를 들 수 있다. 광주시는 자치행정국 산하에 청년정책과를 두고 청년 정책을 자치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혁신이나 자치 관점은 다른 접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 당사자들의 조직화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민관 협치나 소통, 거버넌스가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번째 유형은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부서를 만든 경우다. 복지국 산하 청년복지정책과 소속으로 3개팀을 배치한 경기도가 대표적으로, 이는 노인, 장애인 지원과 함께 청년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만 경기도는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관을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별도로 둔 점이 특이점이다. 이외 성남시도 복지국 사회복지과 산하 청년복지팀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림 2.
부산시 조직도

세 번째 유형은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정책적 접근이다. 전라북도는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관실에 청년정책팀을 두고 있으며, 부산시 역시 일자리경제실 산하 성장전략국에 청년희망정책과를 운영 중이다. 이외 청주시는 재정경제국 산하 일자리지원과에 청년일자리팀이, 고양시는 일자리경제국 산하 일자리정책과가 각각 설치됐다(서복경 2017).

이렇게 지자체마다 다양한 관점에 기반을 두고 청년 정책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정책 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 청년들의 관점을 반영한다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에 대부분의 전담부서가 ‘총괄 기획’, ‘책임 있는 집행’, ‘타부서와의 조율’ 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에 위상과 권한이 약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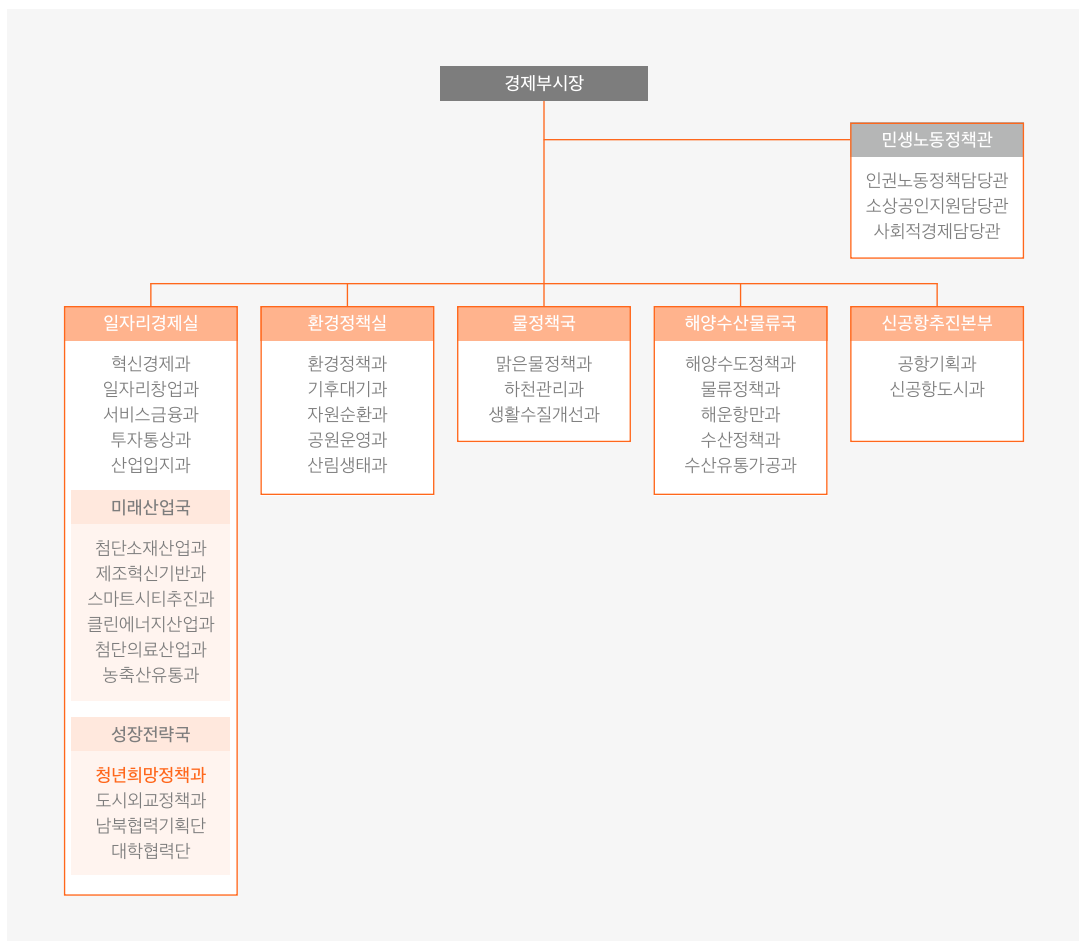


표 1.

주요 광역·기초 지자체
청년 정책 전담조직
설치 현황

출처:
각 지자체 홈페이지

구분	지역	행정조직	실행부서(팀)
광역	서울	청년청	청년기획팀, 청년협력팀, 청년교류팀, 청년활동지원팀, 청년공간운영팀, 청년공간조성팀, 청년인재발굴팀, 청년정책팀, 활동지원팀, 공간지원팀
	부산	일자리경제실 성장전략국	청년인구정책팀
	경기	행정1부지사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청년지원팀, 청년일자리팀, 청년정책팀
		행정1부지사 청년정책관	
	전북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관	청년정책팀
기초	광주	자치행정국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팀, 청년복지팀
	고양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성남	복지국 사회복지과	청년복지팀
	청주	재정경제국 일자리지원과	청년일자리팀
	전주	신성장산업본부 일자리청년정책과	경제정책팀, 창업일자리팀, 청년협력팀, 전통시장육성팀

02. ————— 정책 심의·의결기구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과 연관된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는 자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청년정책위원회다. 정책을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기구로서 지자체 별로 구성원에 차이는 있지만 대개 행정, 의회 관계자, 민간 전문가, 청년 당사자 등으로 이뤄진다. 주체 간 이견을 합의로 이끄는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소통·거버넌스 역량이 가장 활발하게 요구되는 기구이기도 하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 ‘청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기본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을, 시행계획은 연 단위 정책사업을 뜻한다.

위원회 운영의 성패를 가늠하는 주요 지점을 꼽자면 바로 당사자인 청년 참여비율이다. 대개 ‘몇 명 이상’의 형태로 조례에 명시했는데, 지자체마다 전체 위원의 25%에서 60%까지 상이하다. 행정 주도로 구성되는 기구인 만큼 청년 참여에 대한 수용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표 2.

주요 광역·기초 지자체
청년 정책 심의·의결 및
당사자 참여기구 현황

출처:
서북경(2017)

지역	거버넌스 조직 (심의·의결/청년 참여)	인원 (최대)	청년 (최소)	권한	개최 횟수 (연)
서울	청년정책위원회	20	5	심의	2회
	청년정책네트워크	300	300	참여	
경기	청년정책위원회	20	5	심의	1회
	청년정책네트워크	80	-	참여	
대전	청년정책위원회	20	1/4	심의	1회
	청년정책네트워크	50	50	참여	
광주	청년정책위원회	25	-	심의·의결	2회
	청년위원회	50	50	참여	
전북	청년정책위원회	20	7	심의	1회
	청년정책포럼단	50	50	참여	
대구	청년정책심의위원회	20	7	심의	1회
	청년정책네트워크	100	100	참여	
부산	청년위원회	70	1/3	심의	1회
	청년정책네트워크	100	100	참여	
울산	청년정책위원회	20	5	심의	1회
	청년네트워크	50	50	참여	
제주	청년위원회	30	1/2	심의	2회
	청년원탁회의	50	50	참여	
고양	청년정책위원회	20	8	심의	2회
	청년정책협의체	-	-	참여	
수원	청년정책위원회	20	5	심의·의결	2회
	청년정책네트워크	-	-	참여	
시흥	청년정책위원회	20	6/10	심의·의결	2회
	청년정책협의체	50	50	참여	
전주	청년희망도시정책위원회	20	5	심의	2회
	청년희망단	60	60	참여	
완주	청년정책위원회	15	-	심의·자문	1회
	청년정책협의체	30	30	의견수렴	
나주	청년정책위원회	20	7	심의	2회
	청년정책협의체	40	40	의견수렴	

함께 연간 위원회 개최 횟수도 가늠자가 된다. 횟수가 많을수록 위원들이 행정의 정보를 습득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청년들의 정책 효능감을 높인다.

03. — 당사자 참여기구

거버넌스의 또 다른 한 축이 바로 당사자 참여기구다. 민관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선 당사자들의 대표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필요하다. 가장 수월한 방법이 기존에 존재하는 활동 그룹을 참여시키는 것인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조직화된 청년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

이를 감안해 광역·기초 지자체들은 행정이 지원하고 청년들이 참여해 운영하는 이른바 ‘청년정책네트워크’ 또는 ‘청년정책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조직들은 지역 활동가들의 운영역량, 지역 내 청년 분포, 지자체 정책 우선순위 등에 따라 형태와 활동이 다양하다. 무엇보다 당사자 참여기구를 기반으로 정책 심의·의결 기구가 좀 더 수월하게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존재의 의미를 지닌다.

전주시의 청년 참여기구 ‘청년희망단’은 시와 함께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사업으로는 만 18세~34세 청년구직자에게 취업면접에 필요한 정장을 대여해주고 맞춤형 코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청춘꿈꿀옷장’이 있다. 청년희망단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 전주시가 추경예산을 확보해 추가 시행에 나설 정도로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당사자 참여기구가 갖는 현실적인 고민은 여전하다. 바로 서울 및 주요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청년 주체들을 조직화하는 것은 물론 발굴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다수 청년들이 사회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사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터라, 청년단체나 커뮤니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처럼 청년들이 시민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취약해 정책에 관여할만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자체마다 다양한 관점에
기반을 두고 청년 정책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III.

청년 정책 소통·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현재 각 지자체에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 소통·거버넌스 조직은 설립 후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 또는 주체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소통·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추진 중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01.

전담부서 권한 및 역할 강화: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는 청년 정책 전담부서에 과감하게 역할 및 권한을 부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청년 인구가 전체의 29.5%(13만 2,000명·2018.12. 기준)를 차지하는 시흥시는 지난 2016년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함께 부시장 직속 부서 내 TF로 업무를 진행하다 이듬해 주민자치국 자치분권과 소속으로 공식 조직화됐다. 이후 2018년 민선 7기 시정 조직 개편 과정에서 시장 직속 미래전략담당관 청년정책팀으로 재편됐다. 청년 정책이 미래 시정 핵심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개편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조직(2018년 기준)을 살펴보면 시흥시 청년정책팀은 다른 지역의 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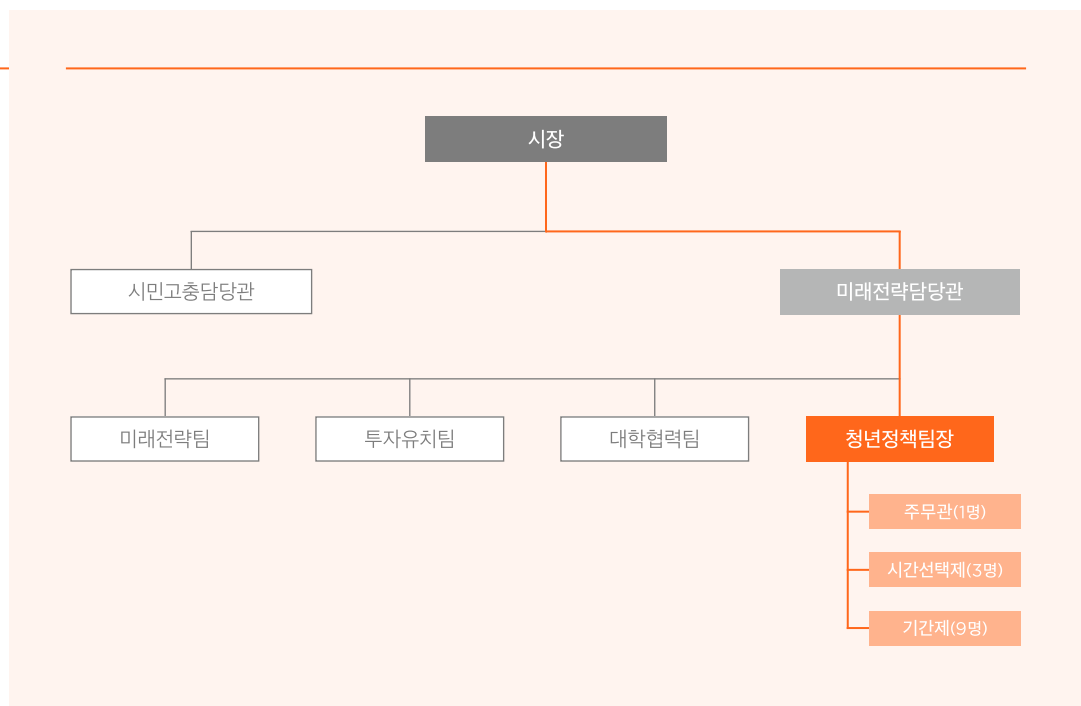


그림 3.
시흥시 청년정책
전담부서 조직구조

출처:
김충진(2018)

지원기구(청년센터)에 비해서도 양적으로 뒤지지 않는다. 실제 부서에는 시청 공무원 2명 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 계약직 매니저 9명 등 총 14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세부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청년정책팀의 핵심 목표가 소통 및 거버넌스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청년성장(연구 인턴십) 프로젝트’, ‘청년정책 거버넌스 역량 강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타부서와 사업 협력 과정에서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 및 집행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청년 따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지역공동체과), ‘청년 취업디딤돌 사업’(지역일자리과), ‘청년체인지메이커’(문화예술과), ‘경기청년 협업마을 운영’(평생학습과)사업 등이 해당한다.

이외 노동인권강사, 주거복지상담사, 내지갑트레이너 등 향후 청년 대상 교육 및 상담사업이 가능한 인재 양성사업을 진행하는 등 시흥시만의 차별화된 청년 사업을 고안하기도 했다.

02. 정책 심의·의결 기구 운영 내실화 : 서울시



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는 서울시 사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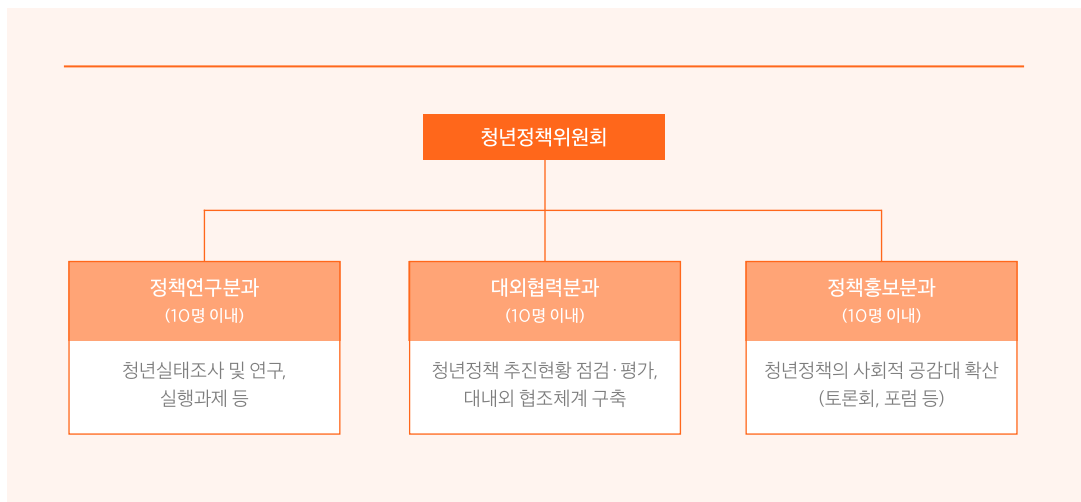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분과별 조직도

출처:
서북경(2017)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전체 위원(20명) 중 청년위원 기준이 '5명 이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위원장인 시장의 강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당연직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서울시장, 일자리노동정책관, 복지기획관, 문화본부장, 주택건축국장 등 행정에서 5명, 시의회 의원 3명, 청년 당사자 8명, 전문가위원 3명 등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주목할 점이 청년 당사자 비율로 전체 19명 가운데 청년이 42%를 차지하고 있다.² 범위를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좁히면 청년 비율은 57%로 높아진다. 특히 위촉직 위원이 시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직을 맡도록 한 점은 청년위원의 권한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지역 위원회와 차별화된 지점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의 경우, 연 2회로 다른 지자체와 대동소이 하지만 3개 분과별(정책연구/대외협력/정책홍보) 최소 2~3회의 별도 회의를 진행하며 정책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차 전체 회의에서는 종합 심의를 진행한다.

03. ————— 청년들의 시민적 역량 토대 구축: 전북 완주군



행정과 소통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청년의 역량 구축이 필수다. 일부 지자체들은 행정의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이해부터 분야별 정책과제 및

2. 서울시는 2018년 8월 시 모든 위원회에 34세 이하 청년위원 비율을 최소 15%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청년위원 15% 할당제'를 발표하며 시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필요 자원 발굴, 대안 제시까지 익힐 수 있도록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 완주군은 청년 당사자 참여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단'을 2017년부터 운영하며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매월 분과별 모임(5개 분야 45명)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네트워크단 활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청년 참여사업도 기획했다.

'청년참여예산제'는 청년들의 정책화 능력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진행한 대표적인 참여사업이다.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는 과정을 지역 청년이 주도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민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청년참여예산제를 통해 2019년 추진하는 사업 중 청년 취·창업에 필요한 학원수강료 등 자기개발비의 70%를 지원하는 '청년 몽땅 배움지원사업'이 가장 눈에 띈다.

완주군 내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는 '청년할당제' 역시 행정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참여제도다. 지역 축제인 '와일드푸드 축제 추진위원회'에 청년 2명을 참여시켜 기획 및 운영 경험을 쌓게 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앞으로 축제 이외 시정 분야별 위원회에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완주군 2018).

그림 5.
지역 축제위원회에
참여해 회의를 진행하는
완주군 청년들



출처: 완주군

청년 정책은 그동안 당사자가 수립과 진행, 평가 과정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채 추진된 한계를 드러냈다. 청년 세대의 다양한 정체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의 의사를 듣기 위한 소통·거버넌스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고, 행정의 언어에 맞게 자신들의 문제를 정리하고 전달하는 역량을 키울만한 적절한 지원도 없었다.

본 희망이슈는 청년들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소통·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전담부서 역할 강화', '정책 심의·의결 기구 운영 내실화', '당사자들의 역량 구축' 등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살펴봤다. 앞선 두 항목의 주체는 '행정', 마지막은 '청년'으로 구분되지만, 결국 광역·기초 지자체가 제도개선 권한과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가진 만큼,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의 적극성과 긍정적 관점이 더 중요해 보인다.

행정이 청년을 단순 정책
수혜자가 아닌 대화 파트너로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를
피하는 방법론도 고민해 볼
지점이다.

물론 이번 논의의 한계도 분명하다. ‘행정 주도로 만든 거버넌스 기구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과연 당사자 전체를 대변하는가’라는 물음에 해답을 제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청년 정책을 말할 때 보통 청년을 동질적인 그룹으로 전제하고 참여자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지만, 실제 이들은 매우 이질적이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공장노동자 등으로 언급되는 경제적 중·하층 청년들은 거버넌스의 장에 접근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엄연히 존재하지만, 목소리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참여 방안 마련 및 제도적 유인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또 한 가지, 행정이 청년을 단순 정책 수혜자가 아닌 대화 파트너로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를 피하는 방법론도 고민해 볼 지점이다. 특히 청년 정책을 복지정책으로만 다룰 경우, 청년을 ‘자신의 어려움과 피해를 증언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로만 인식해온 관성이 굳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년 정책을 거버넌스로 풀어낸다는 것은 청년과 행정이 서로를 동등한 대화상대로 바라보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원활한 거버넌스가 그간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청년 정책에 확실한 전기를 가져올 것이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자리 주거 여가·문화 부채 등 분야별 정책들을 좀 더 당사자 관점에서, 당사자 주도로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윤활유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청년 정책은 청년을 ‘위한’ 정책인 동시에 청년에 ‘의한’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김선기 외 4인(2017), 청년활동의 확장과 고민: 서울시 자치구 청년거버넌스 사례집, 서울시 청년허브, 107-113.

서복경 외 4인(2017), 청년정책 결정 및 집행체계에 대한 경험 연구, 서울시 청년허브, 12-41.

김재우 외 4인(2018), 전주시 청년 실태 조사 및 청년 희망도시 기본계획, 전주시, 195.

김종진 외 4인(2018), 자치단체 청년지원 프로그램 사례 연구, 고용노동부, 90-113.

김병권 외 4인(2017), 지방정부 청년정책 변화 분석을 통한 서울시 청년정책 2.0 과제 도출, 서울시 청년허브

기타

완주군(2018), 민선7기 완주군 공약실천 계획서, 288.

서울특별시 외(2019), 17개 시·도·광역시 청년정책 목록 및 비전표,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자료집.

관련기사

김종진, [세상읽기] '청년' 빠진 '청년정책' 이제 그만, 경향신문, 2019.05.09.

김은정, 완주군 “축제·행사에 청년참여 보장… 10% 할당제 시행”, 전북포스트, 2017.04.27.

더 많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Asia NGO innovation summit
희망제작소를 일사아를할하라
The Young Foundation 2차원의 재발견
정정 ANIS 은각문제총서
기술 시대 정신을
social innovation 물든다
리원집단지성포럼
아시아 사회혁신 사회혁신포럼
어워드

호혜와연대
HAPPY SENIOR AWARDS
아름다운 시니어
사회적
·기원
어린이 함께 시민사회
두번째 인생길게
social innovation

호혜
와연
좋은 일
fund
공정한 노동
good
fund
raiser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민참여형 | 사회적 | 저아저씨,
매니페스트 | 기업가 | 이상해요.

유엔라이브러리
문화예술교육 희망탈사대
김지희개개이 혁신ICT 강상에
희망자리
만들기
NGO
귀농 귀촌 아카데미
노랑테이를
좋은 사람들기 대학생·공공디자인포럼

사회적기업인포럼 도시재생
귀농 귀촌 아카데미
마을이 학교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학인포럼
O416
상상 마을기업
프로젝트
HOPE
인사이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시민희망지수
사회적경제
리포트
렛츠쿨
위키토크
@서울
공유경제
기원

지혜로운학교 좋은 일에도 경음이 필요하다
Think & Do Tank
행동한방
이파트너
공동체
만들기
노사동업 NGO 해피시니어
누가 좋은 어워드
국회의원이가
착한ICT

천개의 직업 1000
수원평생학습관 다락수다 주아로
거버넌스 북민관
출판 : 시장지
학교 방
독립관자
학교
국민교육
국민교육

Together

> 후원회원 신청

02-6395-1415
give@makehope.org

>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 희망제작소

> 희망제작소는

-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싱크앤두탱크 Think & Do Tank 입니다.
-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의제의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 www.makehope.org
- facebook @hopeinstitute
- 02-3210-0909

THE HOPE INSTITUTE ISSUE

희망이슈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시민에게 공유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No.45
2019. 09. 26.